

[오피니언]

월/요/광/장

정준모



해가 바뀌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고 소망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했더기를 생각해 보면 얼굴이 달아오르곤 했던 경험은 필자뿐 만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 소망이라면, 소원이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남다른 실천과 반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지 선언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반복되는 새해소망처럼 구호만 외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선언한다고 모두 부자가 된다면 누가 노력하고 땀을 흘릴 것인가. 문화중심 도시 또는 문화수도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문화중심도시가 되는 것일까. 답은 자명하다. 당연히 '아니다'라는 것이다.

예향이라고 자부하는 광주의 문화예술 기반시설은 이미 매우 우수하다. 국내 최초의 시립미술관을 비롯해서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남도예술회관 등등

이다. 미술관만 해도 본관과 교육홍보관, 금남로 분관, 비엔날레관을 합하면 연면적 3,800평에 이르러 국립현대미술관보다도 400여 평이 더 많다. 그런데 작품소장에 산이나 전시에선 등은 전국에서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건물 등의 기반 시

전당의 경우 국립이기 때문에 국고에서 예산이 지원되겠지만 이외의 문화예술시설은 광주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서 문화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문화산업 플렉스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그 이후 유비지, 운영비에 대한 대안은 없다. 게다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 해선 질 좋은 생산품을 중요하지만 소비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아무리 광주시의 계획을 보아도 소비자를 양성하고 수준 높은 소비자를 유인할 계획은 없는 것 같다. 외국과 타 지역의 소비자를 광주

기억뿐인 우리 아이들이 아닌 자연스럽게 미술관 옆에서 놀던 추억으로 미술관이 놀이터처럼 친숙한 공간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술 소비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략의 이면에는 문화수도 빌바오의 완성을 위해 '빌바오 리아 2000'과 빌바오 메트로폴리 30'이 주도면밀하게 이면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성공사례의 외형만 보고 그 이면은 애써 외면하려는 것일까. 성공의 이면에는 철저한 분석과 기획 그리고 시장성을 쟁여보고 이슬비에 옷듯 관객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중장기 플랜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이고 세우면 그만이 그래서 늘 새로 짓기만 하는 문화예술 진흥책은 이제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예전에 산 차도 기름없이 없어 세워두다가 대형 신차가 나오자마자 또 사서 세워두는 일을 반복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예향이라고 자부하면서 동네에 변변한 상업화랑이나 없는 도시에 문화산업 기지를 세운다고 산업이 융성 할 수 있을까. 새 차에도 옥심은 나지만 형편을 고려해서 우선 세워둔 차를 닦고 조이고 기름 쳐서 다시 타는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선언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기이다. 〈미술평론가〉

※ 본문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문화가 중심 되는 도시

설만 갖춘다고 문화도시가 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현재의 광주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대개 지금껏 문화예술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운영보다는 우선 지어놓고 보면 관객은 올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수요가 있어야 진정한 문화의 전당이 되는 것이고, 수요가 없다면 시설유지비만 낭비하는 애물단지가 될 뿐이다. 사실 문화예술시설이나 기관은 그 기본 건축비의 10% 정도가 매년 운영과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투여되어야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진행 중인 아시아문화

에 유치할 대안도 찾아보기 힘들다. '문 열면 사람온다'라는 방식이다.

미술관이나 도시를 살려냈다는, 그래 많은 도시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빌바오의 경우 사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소비자 즉 관객을 염두에 두고 응의주도하게 설계되었다. 이들에게는 미술관도 중요하지만 미술관 가는 네트워크 강화의 길을 산책하다 보면 자연스레 미술관에 도착하게 되는 동선을 갖추었다. 또 미술관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 아이들이 쉴 새 없이 재잘거린다. 유치원 시절의 미술관 단체관람으로 미술관 하면 다리가 아팠던

〈미술평론가〉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기고



변동원

최근 우리나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7%를 넘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데 이어 2019년에는 노인 인구가 14%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에는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이같은 추세에 비해 일자리, 주거, 복지 등 고령화에 대한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급속한 학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해 노인 단독세대 증가 및 주거문제 심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실버타운은 노인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이다. 실버타운이

는 노인주거시설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은 민간운영시설에 대해 주 또는 연방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감독에 관심을 쏟고 있다. 일본도 국가 차원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노년층 공동생활 주택을 공급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 등으로 대상을 세분화하고 계층별 실버타운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높게 제기되고 있다. 상류층과 저소득층의 경우 각각 민간주도와 국가주도의 실버타운건설을 추진하고 중산층은 민간·공공 협동의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중 중산층을 위해선 ▲로지공사

실버타운 조성 많은 관심 갖자

란 일반적으로 노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의료, 휴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거단지를 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에서 건설·운영 중인 유료 요로원이나 요양원 등이 실버타운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아쉽게도 국내 실버타운은 대다수 노인들의 주거문화 해결에는 그다지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실버타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주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료요로원, 유료노인시설로 송인원은 공동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1천 만원에 달하며, 임대형의 경우도 보증금이 3억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많다. 사업자를 대부분이 일부 상류층을 위한 고급 유료 요로원 및 요양시설 건설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영국 등 유럽은 국가가 운영하

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 참여 등기 부여 ▲기존의 사업지구내 일부 토지를 실버타운으로 용도지정 후 공급 ▲신도시(혁신도시) 계획단계에서 실버타운 부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시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버타운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대부분의 시설이 교외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노인들은 자기가 살던 도시 또는 인근지역에서 생활하고 싶어하는 만큼 신도시나 50만평 이상의 주택단지에 일정 블록을 실버타운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실버타운사업에 대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시점이다. 앞으로의 시대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준비 여부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장애인 전용주차 공간에 일반인이 주차해서야

장애인 차량이 크게 늘어나 주차공간이 혼자로 부족하게 되면서 얼마 전 훨씬이나 보장구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들과 경증 장애인·보호자를 구분한 새로운 장애인 주차표지가 발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증 장애인 차량이나 일반 차량들이 주차하고 있다.

차를 끊겨달라고 부탁해도 선선히 들어주지 않고 갖가지 이유와 광계를 대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큰소리까지 치면서 협약한 욕설을 퍼붓는 일도 자주 일어나고 있다.

나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이웃을 위해 내가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같은 장애인이라도 나보다 더 어렵고 더 심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양보하는 미덕도 갖춰야 한다.

▲배근아·광주시 동구 소태동

기고



유준조

화를 걸어 "선생님께 매를 맞고 담배를 끊었던 학생입니다. 지금까지 담배 값을 계산하면 얼마나 건강과 깨끗한 역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는 인사를 받을 땐 보람을 느끼며 살맛이 난다.

만간고목일지청(滿山枯木一枝青)이라 했듯이 학생들 하나하나를 제 자식들 같이 사랑스럽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며 애지중지하는 선생님들도 의외로 많다.

우리들도 스승님의 은혜로 이만큼 성장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렸다고 본다.

그렇듯이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어려운 학생을 위해 박봉을 쪼개 후

스승님 우리 스승님

원하는 교사도 있고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항상 지켜보며 조언하고 인도하신 교사도 있다.

'스승은 죽었다', '스승의 날은 부패의 날'이라는 사람들의 말도 지나치게 기대가 커했던 분들의 낙담이려니 지나치기도 했으리라.

하지만 이제 그와 같은 불쾌하고 듣기 거북스런 언어나 생각은 접어야 할 때다. 스승의 날 만이라도 이 시대 스승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자.

보다 더 교사답고, 스승다운 모습으로 제자들의 기억 속에 아름다운 영상으로 남으면 더 없는 영광과 보람이 아니겠는가. 〈체육인·수필가〉

교통법규 준수 위해 범칙금 강화 방안 도입을

운전자 대부분이 과속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 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범칙금 납부가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청납자가 징수에 응하지 않아 차량 압류조치를 당하더라도 차량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다 압류해제에 드는 비용도 소액에 그칠 뿐 별도의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차량 압류를 당해도 명의이전이 사실상 가능하며 폐차할 경우 청납된 과태료를 모두 물어야 하지만 수백만원에 달하는 일부 상습 청납자의 경우 차량을 거리에 무단방지하고 하위도난신고를 하는 부작

용을 낳고 있다.

경범죄 위반 범칙금을 제때 내지 않을 경우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규정이 지금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미진한 실정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운전과 법규준수의식을 강화할 목적으로 부과 받은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차량 명의이전이 되지 않도록 범칙금 강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대환·광주시 서구 용두동

無等鼓



그렇다면 지금 지구상에서 노예 제도는 사라졌을까. 최근 번역돼 국내에 소개된 '세계인권사상사'의 저자인 미국 덴버대 미셸린 이사이 교수는 전 세계 노예 수자를 대략 2천700만명으로 추산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채무 노예노동자. 대략 2천만명 정도로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주로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다. 채무 노예는 아동매매로 연결된다.

ILO(국제 노동기구)도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1천230만명이 노예에 가까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 중 거의 절반이 어린이들이고, 55%가 여성이다.

지난 5월 10일은 프랑스 정부가 제정한 '노예제 폐기 기념 국경일'이었다. 이 날은 프랑스가 지난 2001년 노예제를 '반인도주의 범죄'로 규정한 날이다. 21세기 지구상에서도 노예제가 논란이 되는 것을 보면 인간의 심리를 달리 하지 않는 모양이다.

/오주승 정치부장 jsoh@kwangju.co.kr

光州日報

회장 許宰皓

사장 편집·발행·인쇄인 白仁鎬

편집국장 池炯源

1952년 4월 20일 创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장내 사 회 2 부 2200-619 <F A X 227-0118>

판권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 치 부 2200-616 여론면처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63 <F A X 227-9500>

사 회 1 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7-950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F A X 227-9500>

총 무 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0195>

광 고 국 2200-521 판 매 부 2200-551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 지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시 앱 2 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